
2022년 경제정책방향

주요 내용

2021. 12. 20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. 2021년 경제운영 성과 | 1 |
| II . 2022년 경제여건 평가 | 3 |
| III .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| 5 |
| 【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 】 | |
| 1.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| 6 |
| 2.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| 10 |
| 3.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| 14 |
| 【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 】 | |
| 1.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| 17 |
| 2.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| 21 |
| IV . 2022년 경제전망 | 25 |

I. 2021년 경제운영 성과

◇ '21년에는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고 경기·민생 등 완전한 경제회복과 함께,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정책역량 총집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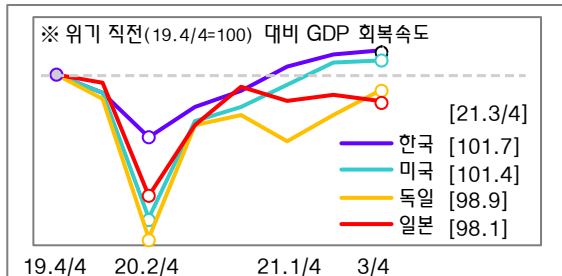
1 [경제회복]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 시현

- ◇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진작, 투자 활성화, 수출애로 해소 등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
- ▶ (내수) 상생소비지원금·상생국민지원금, 소비증가분 특별세액공제, 소비쿠폰, 승용차 개소세 인하,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,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
 - ▶ (투자)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지원, 세제·금융지원 확대, 유턴기업 지원 강화 등
 - ▶ (수출) 출입국·물류 등 현장애로 해소, 수출금융지원 확대, 비대면·온라인 지원 강화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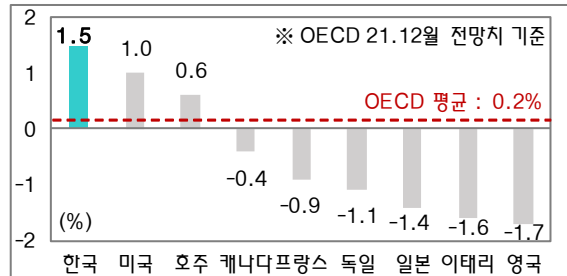
① (성장)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(1/4분기) 위기前 GDP 수준을 회복하였고, 가장 빠른 회복 흐름 지속

- '20~'21년 평균 성장률도 G20 선진국 중 최고 수준으로 전망
- 그 결과, 금년에도 글로벌 경제규모 Top10을 확고히 유지하고 1인당 GNI는 3년만에 증가하면서 3만 5천불 수준 전망

주요 선진국 GDP 회복속도 비교



G20 선진국 '20~'21년 평균 성장률



② (수출) 수출·무역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고, 이에 따라 금년 글로벌 무역규모 순위 1단계 상승(9→8위) 전망

- * '21년 수출액 전망 : 6,430억불<종전 최대 '18년 6,049억불>
- * '21년 무역규모 전망 : 1조 2,555억불<종전 최대 '18년 1조 1,401억불>

③ (고용) 예상을 뛰어넘어 큰 폭 반등하면서 지난해 충격 만회, 월 취업자수도 위기前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회복

- * 취업자수(만명) : ('19) 2,712 → ('20) 2,690<△22> → ('21^e) 2,725<+35>
- * 계절조정 취업자수(만명) : ('20.2) 2,750.8 → ('21.1) 2,648.5 → (11) 2,750.3

⇒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위기극복 모범사례로 평가하고, 이를 바탕으로 견조한 대외신인도 유지

- * Korea's response to the COVID-19 crisis has been the most successful (OECD, '21.2)
- *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 유지, 역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 발행(10.7일)

② [포용강화] 코로나 격차가 완화되고 고용·사회안전망도 확충

◆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및 고용·사회안전망 확충 노력 지속

※ 소상공인 지원, 고용안정 등을 위해 2차례 추경 편성(1차 14.9조원, 2차 34.9조원)

- ▶ (소상공인) 버팀목·희망회복자금, 저리대출, 사회보험료·임대료부담 경감, 손실보상 등
- ▶ (고용유지) 고용안정지원금, 고용유지지원금 확대, 공공일자리 창출 등
- ▶ (안 전 망)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, 생계급여 지원 강화, 아동수당·기초연금 확대 등

① (소득·분배)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3/4분기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하고, 분배지표도 개선 흐름 지속

* 가계소득 증가율(%) : ('20.4/4) 1.8 ('21.1/4) 0.4 (2/4)△0.7 (3/4) 8.0<역대 최대폭>
- 1분위소득 증가율(%) : 9.2 9.9 △6.3 21.5

* 5분위배율 증감('19년 대비, 배p) : ('20.4/4)△0.05 ('21.1/4)△0.44 (2/4)△0.15 (3/4)△0.42

② (안전망) 고용보험 가입률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지속 증가

* 근로자 고보가입률(%) : ('16)69.7 ('17)71.2 ('18)71.6 ('19)70.9 ('20)72.6 ('21)75.2

*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(만명, 기말) : ('17)158 ('18)174 ('19)188 ('20)213 ('21.11)235

③ [도약준비] 혁신 성과 가시화 등 선도형 경제 도약의 기반 구축

◆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에 주력하면서, 미래 구조전환에 대비한 선제 대응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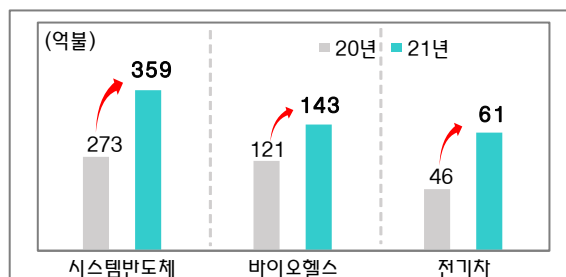
- ▶ 한국판 뉴딜 2.0<'21.7>, K-반도체 전략<'21.5>,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<'21.8>,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<'21.7>, 벤처 보완대책<'21.8>, BIG3+인공지능 인재양성방안<'21.4> 등
- ▶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<'21.10>, 탄소중립기본법 제정<'21.9>, 제3기 인구 TF 가동<'21.2~> 등

① (차세대성장동력) BIG3 등 신산업 수출 증가, DNA 생태계 강화, 제2 벤처붐 확산 등 혁신성장 성과가 본격 가시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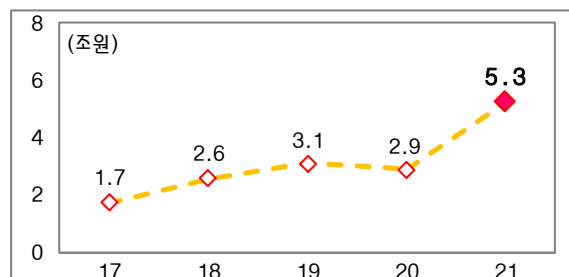
* AI 공급기업수 : ('19) 220 → ('21) 991 / 데이터 공급기업수 : ('19) 393 → ('21) 1,126

* 국내 Data산업 시장규모(조원) : ('16)13.8 ('17)14.4 ('18)15.6 ('19)16.9 ('20)19.3

BIG3산업 수출(1~11월 누적 기준)



벤처투자 금액(1/4~3/4분기 누적 기준)



② (구조전환)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,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저탄소 전환이 가속화되고, 인구·지역경제 대책의 실효성 제고

* 수소승용차 보급 현황('21.9월, 만대) : (한국) 1.71<세계1위> (미국) 1.16 (일본) 0.64

* 한국의 탄소중립 준비 역량은 아시아 국가 중 2위(KMPG, 글로벌 컨설팅 기업)

II. 2022년 경제여건 평가

◇ '22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 지속, 일상회복 추진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으나, 대내외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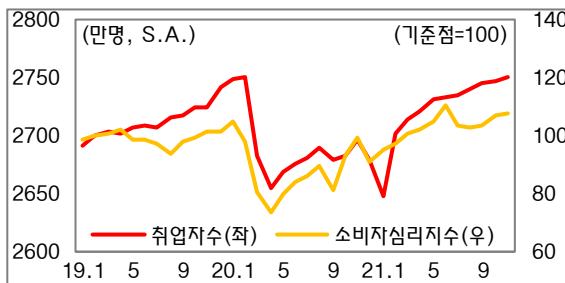
1 [성장] 소비·투자·수출의 고른 증가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

○ (소비) 국내외 경기 개선에 따른 그간의 고용·소득 증가, 심리 개선 등이 소비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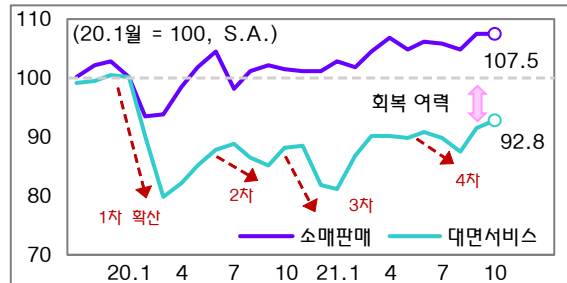
* 취업자수 증감(만명) : ('19) 30 → ('20) △22 → ('21^e) 35 → ('22^e) 28

▪ 다만,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른 방역 상황 전개 추이가 불확실성으로 작용

취업자수 및 소비자심리지수 추이



재화소비·대면서비스업 생산 추이



○ (투자) 반도체 등 IT 부문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, 신성장·친환경 분야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수요 확대 전망

* 반도체 매출 증가율 전망(% , WSTS<'21.11월>) : ('21^e) 25.6 → ('22^e) 8.8

▪ 건설투자도 주택착공·SOC 예산 확대 등에 힘입어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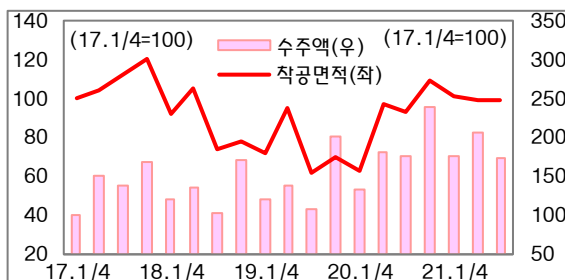
* 주택 착공면적(전년동기비, %) : ('20.3/4)50.0 (4/4)55.4 ('21.1/4)63.0 (2/4)2.2 (3/4)6.7

* SOC 예산(조원, 본예산 기준) : ('21) 26.5 → ('22) 28.0 <전년대비 +1.5조원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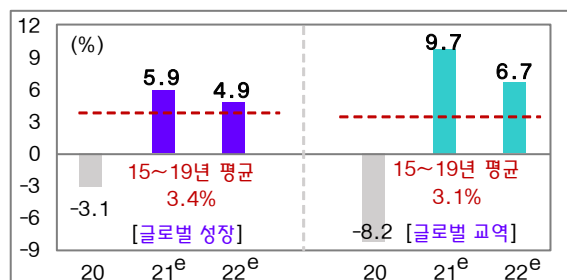
○ (수출) 양호한 글로벌 경기·교역 여건 하에 증가세 유지 전망
<다만, 금년 가파른 증가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증가율은 둔화>

* 수출 증가율(%) : ('21.1/4)12.5 (2/4)42.1 (3/4)26.5 (10)24.2 (11)32.0 (12.1~10)20.4

주택건설 선행지표 추이



글로벌 성장률·교역 증가율(IMF, '21.10)



② [고용] 개선 흐름이 지속되겠으나, 구조적 제약 요인 상존

- (수요) 고용창출력이 높은 대면 서비스업 업황 회복, 일자리 정책지원 확대 등이 노동수요 개선을 뒷받침

* 취업유발계수(명/10억원): (음식숙박)19.0 (예술·스포츠·여가)14.5 (제조업)7.6 (건설업)10.8

* 일자리 예산(조원, 본예산 기준): ('21) 30.1 → ('22) 31.1 <전년대비 +1.0조원>

- (공급) 최근 구직활동 확대 추세는 긍정적 요인이나, 생산가능 인구(15~64세) 감소가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

* 경제활동참가율(% , 1~11월 평균): ('19) 63.4 → ('20) 62.6 → ('21) 62.8

* 생산가능인구 증감(만명): ('20)△24.9 → ('21^e)△34.9 → ('22^e)△35.5

③ [물가] 당분간 수요측·공급측 상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

- (수요) 대면 서비스 등 내수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수요측 상방 압력이 높아지겠으나, 코로나 전개 양상 관련 불확실성 상존

- (공급) 농축수산물·석유류의 경우 금년 작황 개선, 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등으로 금년 보다는 완만한 가격 상승이 예상

* '21년 주요 품목 생산량 전망(천톤): (배)185<전년비 +39.3%> (사과)478<+13.2%>

(쌀)3,880<+10.7%> (겨울양배추)171<+3.3%>

* 국제유가 전망(\$/B, 주요기관 평균): ('20) 42 ('21^e) 70<+65.5%> ('22^e) 73<+4.3%>

- 다만, 가공식품·외식물가는 그간 원재료비 상승 요인이 점차 반영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될 소지

④ [리스크]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전세계적 리스크 확대 예상

- (글로벌 리스크) 오미크론 확산, 공급망 차질 장기화,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 등이 경기·물가·자본유출입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

1) 오미크론 77개국 확산(12.15일) → 세계경제 성장 둔화·물가 상승 위협(무디스·피치 등)

2) 공급망 차질 영향 및 인플레이션이 '23년까지 지속될 가능성(무디스)

3) Fed(12월 FOMC): 1월부터 테이퍼링 가속 결정 → 가계·한계기업 부담 증가 등 영향 예상

- (부채 리스크)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가계·자영업자·한계기업 부채가 경제·한시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 현실화 우려

* 가계신용(전년동기비, %, 기말 기준): ('19)4.2 ('20) 8.0 ('21.1/4) 9.5 (2/4)10.4 (3/4)9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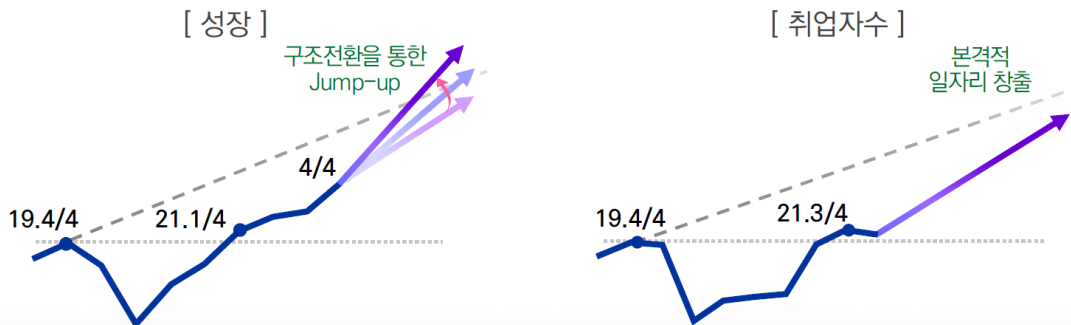
* 자영업자 부채(전년동기비, %, 기말 기준): ('19)9.7 ('20)17.3 ('21.1/4)18.8 (2/4)13.7

- (구조적 리스크) 생산가능인구 감소, 포스트코로나 시대 산업구조 변화(디지털화/탄소중립), 新양극화 등이 고용시장 중심으로 영향 예상

Ⅲ.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

정책
목표

위기극복을 넘어 **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**



3
+
2
정책
방향

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

①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

- ① 정책조합(Policy Mix) 최적화
- ② 피해부문 중심 내수 진작
- ③ 경제 전반의 투자 분위기 확산
- ④ 역대급 수출 호조세 지속

②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

- ①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
- ②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
- ③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
- ④ 新양극화 대응

③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

- ① 글로벌 공급망 변화 탄력 대응
- ②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연착륙 지원
- ③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기조 안착
- ④ 금융·외환시장 안정 및 대외이슈 대응

+

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

①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

- ①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
- ② BIG3 등 유망 신산업 육성
- ③ 주력 제조업·서비스산업 혁신
- ④ 벤처창업, 인재양성 등 혁신기반 조성

②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

- ① 탄소중립 후속조치 본격 이행
- ② 인구·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
- ③ 공정·상생·사회적 자본 확산
- ④ 노동·재정·공공부문 혁신

추진
기반

단계적 일상회복 이행

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

1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

◇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넘어 **정상 성장궤도로 도약**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**조화롭게 운영**하고 **내수·투자·수출** 등 부문별 활력 제고에 진력

① 안정적 성장흐름 지속을 위한 최적 정책조합(Policy Mix) 운영

- ① **(재정)** 경기회복세 확대 및 민생경제 안정·新양극화 해소 등을 본격 뒷받침하기 위해 **적극적 재정기조 견지**
 - **확장재정**(총지출 +8.9%) 효과 제고를 위해 **상반기 조기집행 기조**(63%)를 유지하되, 경기·물가상황을 보아가며 분기별 집행규모 조정
 - * 상반기 집행목표(%) : ('18) 58 ('19) 61 ('20) 62 ('21) 63 **(22) 63**
 - **지방·교육재정**은 금년대비 **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상향**
 - * 상반기 집행목표(%,'21→'22년) : (지자체) 60.0→**60.5** (지방교육) 63.5→**64.0**
 - '21년 초과세수에 따른 교부세(금) 정산분은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확정 즉시('22.4월) 지자체에 지급하여 추경 편성 등에 활용 독려
- ② **(통화)** 성장·물가흐름, 금융불균형 누적,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
- ③ **(금융)** 누적된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한시조치를 '**질서 있게 정상화**'해 나가되, 연착륙을 위한 보완방안도 적극 강구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회사채 매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저신용 회사채·CP 매입기구(SPV)) '21년말 매입 종료 + 필요시 매입 재개토록 비상기구화 ▶ (P-CBO/산은 회사채·CP 차환지원) 잔여재원¹⁾을 활용하여 시장안정 기능 보강²⁾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잔여재원 : (P-CBO) 3.8조원 / (차환지원) 3.6조원 2) 산은 회사채 차환지원 대상: (현행) BBB이상 → (개선) BB(Fallen angel 한정)까지 확대 |
|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만기연장·상환유예 연장조치(∼'22.3월말)가 정상화되더라도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출이 차질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▶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간,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(캠코) 매입기간 연장('21.12→'22.6월말) ▶ 旣마련 정책금융기관 연착륙 프로그램 본격 가동(총 4조원 규모 / 잔여 3.3조원) + 중소기업 전용 2조원 신규유동성 공급¹⁾,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대출 연착륙 방안 마련²⁾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산은 '힘내라 대한민국 대출 시즌2^가' / 2) 산은(차주)이 기업대상 맞춤형 채무구조 개선조정 지원 |
| 금융규제 유연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예대율·유동성(LCR) 규제 한시완화(∼'22.3월말)는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등과 연계하여 정상화 검토, 정상화 시에도 단계적 규제 상향 등 시장 영향 최소화 추진 |

- ④ **(방역)** 방역상황 안정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 확충, 백신접종률 제고, 치료제 도입 등을 차질없이 추진

* '22년 중 백신 1.7억회분·경구용치료제 60.4만명분 확보,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상 확보 지속

②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 지원 ※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 추진

① 피해업종 등 소비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·재정 인센티브 확충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추가소비 특별공제 | <p>▶ '21년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하고¹⁾, 피해부문 지원 보강을 위해 전통시장 추가소비 대상으로 별도 소득공제 신설²⁾ <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최대 20% 공제효과></p> <p>1) (대상) '21년 대비 5% 이상 증가한 카드등 사용액 (공제율) 10% (공제한도) 100만원</p> <p>2) (대상) '21년 대비 5% 이상 증가한 전통시장 소비 (공제율) 10% ※ 공제한도는 100만원 공유</p> |
| 상생소비 더하기 ⁺ | <p>▶ 소상공인 등에 일정금액 이상 소비시 추첨번호 부여 → 익월 추첨 통해 당첨금 지급</p> <p>* (시행기간) 동행세일(5월, 잠정) 전·후 3개월 / 대상 소비차당첨금 지급방식 등은 추후 확정</p> |
| 상생소비의 달(5월) | <p>▶ '22.5월(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)을 '상생소비의 달'로 운영 → 지역사랑·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(최대 월100만원) 및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 확대(10% → 최대 15%)</p> <p>* 캐시백 지급 확대는 참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</p> |

② 그간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 연장 및 재추진

- **소비쿠폰 중 잔여 가용부분은 이월하여 피해분야 지원에 지속 활용**
* '21→'22년 이월 예상 쿠폰: 숙박, 실내체육시설, 프로스포츠 총 3종 / 약 400억원 규모
- 차량 출고 지연 상황 등 감안, **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**(~'22.6월)
- 대규모 소비이벤트를 순차 개최*하고, **지역사랑상품권**(국비지원 15조원)·**온누리상품권 발행**(3.5조원) 지원 지속
* (5월초) 대한민국 동행세일 → (11월) 코리아세일페스타 → (12월) 크리스마스마켓

③ 방역상황을 보아가며 '22년 상반기 중 교통·숙박·유원시설 할인* 등을 연계한 "**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**"^{가칭} 운영

- * (KTX) 관광지 입장권 결합상품 할인판매 (유원지) 자유이용권 할인 (숙박) 숙박쿠폰 이월분 활용 등
- **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를 5곳 이상**(현재 3곳)으로 확대
* 휴가비 40만원(근로자 20 + 기업 10 + 정부 10) + 지자체 상품 할인 지원(최대 10만원)

④ 방역상황 개선과 연계하여 국제관광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상화

- 국제관광 본격 재개 시까지 **무착륙 관광비행 6개월 연장**(~'22.6월)
- **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** 등을 위해 **면세점 구매한도**(5,000불) **폐지**
-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확대 등 출입국 편의를 점진적 확대
- **국제관광 정상화 시점** 등을 감안하여 K-POP 연계 대규모 행사인 "**K-culture Festival**"을 **조기 개최**, **방한관광 재개 신호탄**으로 활용
* ('21) 11월중 2일간 개최 → ('22) 금년보다 앞당겨 **10일 이상** 개최, **콘텐츠 대폭 보강**
- **외국인관광객 부가세 등 즉시환급 한도 상향**(現 200만원 → 250만원)

③ 미래대비 투자를 중심으로 기업투자 인센티브 대폭 확대

① 전략기술·탄소중립 투자 등에 대한 세제·금융 인센티브 확충

- R&D·시설투자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¹⁾한 '국가전략기술' 지정²⁾
 - 1) 신성장·원천기술 대비 공제율 상향 → R&D +10%p, 시설투자 +3~4%p
 - 2) 반도체·배터리·백신 분야에서 65개 기술 신규 지정 예정('22.2월 조특법 시행령 개정)
-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**공동시설**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 허용*
 - * 일정비율 이상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시 인정('22.2월 조특법 시행령 개정)
-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**수소** 등 **탄소중립 핵심기술** 세제지원 강화
 - '**탄소중립**'을 신성장·원천기술의 **별도 분야**¹⁾로 **신설**하여 관련 혁신기술²⁾, 탄소 다배출 업종 주요기술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('22.2월)
 - 1) (현행) 미래차, 전자정보 디바이스, 바이오·헬스 등 12개 분야 → (개편) 12+1분야(탄소중립)
 - 2) 수소유동환원, 비고로 제철, 그린수소 생산, 전기가열, 나프타 분해 기술 등
 - 이 중 **수소** 관련 기술 등 국가경제·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별, **국가전략기술**로 지정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
- 정책자금도 전략산업·탄소중립 대응 투자* 등에 집중 공급
 - * 국가전략기술 분야 설비투자 특별자금(2조원), 탄소 스프레드(5조원 감축설비투자 저리대출)·탄소 넷제로 프로그램(0.3조원 탄소중립 기반조성 마중물 투자), 저탄소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(35조원 ~30년) 등 가동

② 국가전략산업,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·제도 기반 완비

- '**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**' 제정 및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
 - 세부 지원내용·절차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을 추진('22.上)하고, 이후 전략기술* 지정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신속히 확정
 - * 경제안보 차원에서 특히 중요하고,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의 토대가 되는 기술
- '**산업집적법**' 개정('21.6월)으로 도입된 '첨단투자지구'를 상반기 중 지정·운영*하고, 이를 토대로 연내 '**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**' 수립
 - * 기존 계획입지(산업단지, 경자구역) 활용 또는 대규모 첨단투자기업 희망 지역(개별형) 지정

③ 현장애로 해소, 제도개선,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'22년 주요 투자 프로젝트 추진목표를 115조원 규모로 확대

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추진목표(단위: 조원)

| | 계 | 기업 | 민자 | 공공 |
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'21년 | 110.1 | 28.0 | 17.3 | 64.8 |
| '22년 | 115.5 | 33.0 | 15.5 | 67.0 |

④ 중소건설사 자금 및 철근공급 안정화 지원¹⁾, 공공부문 공사비 산정시 시장가격 적기 반영²⁾ 등 건설투자 보완 노력도 지속

- 1) 중소 건설사(6개 업종) 정책자금 지원 6개월 연장(~22.6월말), 철강사·건설사 간 온라인 직접거래 등
- 2) 철강 등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의 가격공개 주기 단축(현재 반기별→분기별 공개)

④ 경제회복을 견인해 온 역대급 수출 호조세 지속

① 수출기업의 **물류애로**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**총력 지원체제** 지속

| | |
|-----------|---|
| 선적공간 확보 | ▶ 미주·유럽 항로 임시선박 투입, 중소화주 대상 전용선복 지속 제공 |
| 물류비 부담 완화 | ▶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을 '22년에도 지속 시행(170억원) ▶ 물류피해 특별대출(수은), 무역보험·보증 우대(무보) 등 특화 금융지원 지속 |
| 장기계약 활성화 | ▶ 장기운송계약 체결지원 사업 (중진공/무역협회 주도)은 美 서안항로(300TEU/항차) 대상 지속 운영 - 민간 주도(업종별 협회/물류 주선업체 등) 장기계약 중개 모델 도입 검토 ▶ 장기운송계약 체결 선·화주 대상 계약이행 보증상품 개발 검토, 우수포워드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(매출액 100억원 이상 요건 폐지) 등 인센티브 강화 |
| 인프라 보강 | ▶ 부산항 신항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 확충('22.2월), 신규 터미널 적기 개장('22.6월) ▶ 해외공동물류센터(3개소) 구축, 중소화주 대상 해상운송-현지 내륙운송 연계 지원 |

② 수출 개선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강구

○ 수출금융은 중소·중견기업을 중심으로 5조원 확대된 **261조원** 공급

기관별 수출금융 공급 계획(단위: 조원)

| | 수은 | 무보 | 신보 | 기보 | 중진공 | 합계 |
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|
| '21년 | 72.1 | 167.0 | 13.0 | 3.2 | 0.5 | 255.8 |
| '22년 | 69.0 | 175.0 | 13.5 | 3.3 | 0.4 | 261.2 |

○ 국내 실정을 반영한 '**한국형 해운운임지수***' 개발·공표('22년)

* 기업들이 실제부담하는 운임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, 근거리 교역(중국, 동남아)에도 활용 가능

○ 既선정('21.12)된 **321개 '수출 두드림 기업'**(수출 유망소상공인) 대상으로 컨설팅·자금·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연계*하여 집중 육성

* (중진공) 수출바우처·온라인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, (소진공)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지원 (KOTRA) 해외무역관 통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(지신보) 우대보증(보증한도·보증비율) 지원

○ 해외수요가 높은 유망 농식품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¹⁾ 관계기관 합동 '**스마트팜 수출지원팀**'을 구성하여 해외시장 본격 개척²⁾

1) 신선농산물(딸기, 포도) 전용 항공가·선복 운영 전통식품 현지화 지원(비건제품 개발, 해외인증 취득 등)

2) 유망국가에 국산 시스템 및 기술실증을 위한 시범온실을 구축(2→3개소), 수출거점으로 활용

③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**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충**, 對개도국 개발협력 지원 등 국제협력에 기반한 **수출저변 확대** 노력 지속

○ **CPTPP*** 가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 강화

* 日·호주·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11개국에 참여하는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

○ **RCEP 발효**('22.2월~) 등 계기 수출기업들의 **FTA 활용 편의 제고**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 간소화*

* 국내 제조만으로 국내산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은 원산지소명서와 입증서류 제출 생략

- ◇ 성장경로 복원과 함께 **그간 피해가 컸던 민생부문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재도약, 생활물가 안정, 일자리 지원, 新양극화 해소** 등에 주력

① 소상공인들의 피해극복 및 재도약 본격 지원

①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정상화될 때까지 **피해극복 지원**에 만전

-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 →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영업피해를 **더욱 두텁게** 보상
-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**저리자금 35.8조원**을 공급하고 세금·임대료·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지원도 당분간 지속

| | |
|---------|--|
| 저리자금 | ▶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(금리 1~1.5%) 일상회복특별용자 2조원 (금리 1%) 소진자금 일반용자 2.8조원(금리 2~3%대), 시중은행 용자(자신보) 21조원(금리 2~3%대) |
| 세정지원 | ▶ 인원·시설이용제한업종 소규모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 유예 (‘21.11→’22.5월) |
| 임대료 | ▶ 「 착한 임대인 」 세제지원 (~’22년말) 및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(~’22.6월말) 조치 지속 ▶ 폐업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「 상가임대차보호법 」 시행 |
| 보험료·공과금 | ▶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·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(’22.1~3월분) ▶ 소상공인·취약계층 등에 전기·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(’22.1~3월분) |

- 문화·공연·예술 등 주요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**맞춤형 지원**¹⁾ 및 **특화 금융지원**²⁾ 강화

1) 예술인 창작지원(21만명), 영화·공연 현장인력(6,800명), 체육 방역물품 지원(5.5만개社) 등

2) 관광기금 전체 대출잔액 금리인하(최대 △1%p)·상환유예(1년), 체육 초저금리대출(1.6%대, 500억원)

- 향후 방역상황과 연계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 강구

②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구축을 위해 폐업-재도전-창업-성장 등 단계별 **맞춤형 지원 프로그램** 보강

| | | |
|--|---|---|
| 경영위기 : 선제적 재기 유도 ▶ 폐업 전 회복을 선제 지원하는 「 경영개선패키지 」 신설(1천개사) ▶ 소진공 정책자금 연체이자율 인하 (6%→약정이자+3%p) | 폐업 : 원스톱 지원 ▶ 컨설팅·법률자문·철거비를 원스톱으로 지원(1만명) ▶ 폐업시 정책자금 회수유보 확대 (현재 무연체사→3회 연체 전까지) | 재도전 : 유망분야 재창업·취업 ▶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영업자 참여 요건 완화 6개월 연장 (~22.6월) ▶ 업종전환재창업지원금 자부담 중 현물인정비율 상향 (60→70%) |
| 창업 : 아이디어 기반 혁신창업 ▶ 교육·실습, 멘토링, 사업화자금을 패키지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('21년 15→'22년 17개소) ▶ 창작자·스타트업과 협업하는 ' 강한 소상공인 ' 고도화자금 최대 1억원 신규 지원 | 성장 : 디지털·스마트化 ▶ 민간 우수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프로그램 과 정부 디지털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 ▶ 온라인 판로지원 및 구독경제 활성화, 스마트기술 도입 등 지원 지속 | |

②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

① 범정부(중앙·지자체) 물가 대응체계 확대·개편

- 기존 점검체계(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)에 더해 **장관급 점검체계**(비상경제중대본 활용)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, 분야별 물가 '**부처책임제**' 도입
 - * 부처별로 소관분야를 지정하여 각 부처가 책임지고 수급관리 및 구조적 대응방안 마련
 - ↳ (농식품부) 농축산물·가공식품·외식, (산업부) 석유류, 내구재 등 공업제품 등 / (기재부) 총괄TF 운영
- 행안부·지자체는 '**물가상황실**'을 운영하여 현장 물가안정 대응* 강화
 - * 부당요금, 계량위반, 가격·원산지표시 불이행,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 집중 단속

② 주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**맞춤형 가격·수급안정 방안** 마련

| | |
|---------------|---|
| 석유류 원자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유류세 인하조치(~22.4월)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적 환원 검토 ▶ '22년 중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한시 상향'(22~23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소기업) 10% → 20% (중기업) 수도권 0% / 비수도권 5% → 수도권 10% / 비수도권 15% ▶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KRX석유시장을 통한 주유소 석유제품 혼합판매 지원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구매물량 세액공제를 확대(0.2→0.3%), 혼합판매 주유소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 등 점검 ▶ 비축유 '정책대여' 제도 운영의 탄력성 제고방안 검토 ▶ 일부 도심부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(현행 1km) 완화 ▶ 6대 비철금속(알루미늄·납·구리·아연·니켈·주석) 비축물자 재고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(현재 관련 방안 연구용역 중) + 할인방출 시 중소기업 우선판매 도입 |
|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농축수산물 할인쿠폰(20~30%/1만원 한도)은 '22년에도 지속 지원(590억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농축수산물 소비가 확대되는 명절기간·김장철에는 지원한도 확대(1→2만원) ▶ 계란 공판장 확산*, 원유 가격결정구조 개선안 적용 등 불합리한 가격결정구조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21.12월 2개소(포천·여주) 운영 개시 → '22년 2개소, '23년 1개소 추가 ▶ 'Agro-biz 포럼' 내 물가대응분과 주기 개최 등 현장과의 소통 강화 |
|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중앙공공요금은 원가를 고려하되, 자체 비용절감 등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 ▶ 지방공공요금 공개대상을 확대(광역·기초)하고,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인센티브 제공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22년 지방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을 균특회계 평가요소에 반영 및 추가 지원방안 검토 ▶ 착한가격업소 금융지원 확대¹⁾, 배달플랫폼 배달비²⁾ 등 생활밀접 가격정보 상세 제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△0.5%p 감면, 지역신보 보증료 감면우대(△0.1→△0.2%p) 등 2)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월1회 배달비 조사 → 소협·소비자원 홈페이지 게재 |

③ **구조적 물가안정 과제** 발굴·대응

- 주요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촉진 방안, 공공요금·수수료 안정 방안, 민간 역할 제고방안 등 마련
 - * 예) 통신비, 플랫폼수수료, 농축수산물 등 유통·가격결정구조 개선,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, 소비자단체 물가감시 기능 강화, 주요 품목 국내외 가격차 분석 등
- 공급망·물류 차질 등에 따른 물가압력 해소방안도 다각도로 강구

③ 코로나 고용 이력효과 최소화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강화

① 코로나 이력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직무역량 강화, 취업유인 제고, 구인·구직 서비스, 공공일자리 등 부문별 지원을 유기적으로 추진

| | |
|-----------|---|
| 직무역량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면 실험·실습 등 참여가 제한됐던 코로나 학번 취업역량 강화 중점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로나 학번 졸업생('21년 졸업/'22년 졸업예정)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인하(△15%p) - 코로나 기간 비대면 수강생(졸업생 포함)에 대해 대면 실험·실습 과정 재참여 허용 ▶ 기업의 인턴형 일경험(국민취업지원제도) 채용한도 상향(고용보험 피보험자의 20%→40%) |
| 취업유인 제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유인 제고를 위해 3개월 내 취·창업 성공시 기존 취업성공금(최대 150만원)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추가 지급 |
| 구인·구직 서비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민취업지원제도 1년 운영성과를 토대로 「1차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」 수립('22.1/4분기) ▶ 청년대학일자리센터 기능 강화(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), ^{중장년}새출발 크레딧 신규 지원 등 |
| 공공부문 뒷받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22년 직접일자리사업(106만개) 1월 중 50만명 이상 채용 추진 ▶ 국가직공무원 75% 이상 3/4분기까지 채용 확정('21.3/4분기 70%) |

②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·세제 등을 다각도로 지원

- 고용중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'21년말→'24년말)
- 취약계층의 민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장려금 등 지원 강화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취약계층 | 고용촉진장려금 확대(年720만원, 1.2~2.8만명) | 여성 | 직업훈련 확대, 3+3부모육아휴직제 도입 |
| 고령층 |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(분기당 30만원, 6천명) | 장애인 | 신규고용장려금 신설(월 최대 80만원, 3천명) |

③ 고용구조·근로형태 변화 등에 대응하여 고용안전망 지속 보강

-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특고·플랫폼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을 완료¹⁾하고,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²⁾
 - 1) ('21.7) 특고 12개 직종 (**'22.1**)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(**'22.7**) 기타 특고·플랫폼 / (~'25) 자영업자 <자영업자 적용방안 지속 연구·검토(경사노위 內 자영업자 고용보험 연구회 운영 중, '21.9~)>
 - 2) 플랫폼·가사근로자 신규지원, 영세사업장 일용근로자 요건완화(미가입기간 1년→6개월)
-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 제·개정,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등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

④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한 고용통계·제도 개편 추진

- 새로운 고용형태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종사상 지위 분류를 개정*하고, 비정규직 범주 등 노동관련 제도 논의·검토 지속
- * 의존계약자 신설,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세분화 등

⑤ 주52시간 현장안착을 위해 컨설팅·보완제도를 확산시키고, 중대재해 처벌법*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·사회적 대화 추진

* '21.12월 경사노위 內 「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」 출범, '22.1월 법 시행

④ 부문별 격차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등 新양극화 대응

① 코로나로 확대된 부문별 격차의 신속한 해소에 주력

| | |
|--------|--|
| 교육 | ▶ 교육급여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재비 등 특별지원(약 31만명, 1인당 10만원) ▶ 저소득 고교생 EBS교재 무상제공 지원범위 확대 (생계·의료·교육급여 → 주거급여 수급자 포함) |
| 문화체육 | ▶ 문화누리카드 지원을 기초수급자·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('21년 75%수준 → '22년 전체 지원) ▶ 취약계층 유·청소년·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('21년 7.2만명·8만원·8월 → '22년 8.6만명·8.5만원·10월) |
| 코로나 블루 | ▶ 만 19~34세 청년에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'마음건강 바우처' 지원개시('22.上~) ▶ 지역주민 정신건강 지원허브인 '정신건강복지센터' 확충('21년 260 → '22년 271개소) |
| 디지털 | ▶ 정부의 디지털 격차해소 의무 및 디지털포용정책 추진체계 등을 담은 「디지털포용법」 제정 추진 |

② 현장 목소리를 추가 반영하여 「청년 희망사다리」 업그레이드

- **주거**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(월 20만원)을 받는 청년도 잔여 월세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 월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
* 예) 월세금 40만원 → 특별지원금(20만원) 외 잔여 20만원 무이자대출 지원
- **일자리** 군 복무에 따른 학업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군장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을 확대¹⁾하고 더 많은 대학의 원격강좌 제공 유도²⁾
1) ('21) 수강료의 50% / 2.2만명 → ('22) 수강료의 80% / 2.4만명
2) 대학 정보공시사이트(대학알리미)에 대학별 군 복무 원격강좌 운영현황 공개 등
- **일자리** 「청년희망 ON 프로젝트」* 확산을 위해 참여기업을 대기업 외 경쟁력 있는 중견·중소기업 및 플랫폼 기업까지 확대
* 기업은 청년채용 확대 및 교육훈련 멘토링 등 지원 정부는 훈련바교육공간 등 인프라 지원
- **교육**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 및 가산금 요율을 하향 조정*하고,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대출을 포함
* (연체금 한도) 상환 고지금액의 9% → 5% / (가산금) 매월 1.2% → 매월 0.01%

③ 취약계층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부문별 사회안전망 보강

| | |
|------|---|
| 생계 | ▶ 부모와 주거지가 다른 20대 중증장애 청년 을 개별 가구로 분리하여 생계급여 수급 허용 |
| 의료 | ▶ 근골격계 질환 검사·치료 급여화, 치과분야 급여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지속 확대 |
| 돌봄 | ▶ 통합재가서비스 본사업 추진 ▶ 자택에서 의료·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'재택의료센터' 도입 ▶ 긴급돌봄 지원대상을 코로나 외 질병·사고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까지 확대('22년 시범추진) |
| 취약계층 | ▶ (장애인)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(월100→125시간) 등 ▶ (한부모)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인상(월10→20만원) 등 |

④ 불법행위로부터 서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3대 패키지 추진

| | | | |
|--------|--|--------------|---|
| 보이스 피싱 | ▶ 금융·공공기관 중심으로 진위확인이 용이한 차세대 메시지(RCS) 적극 도입 ▶ 피해발생시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* 현재는 금감원, 경찰청, 과기부 등에 분산 ▶ 사전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 추진 * A기반 보이스피싱 차단 백신(과기부·경찰청 협업) 등 | 불법사금융 | ▶ 피해자 법률대리·공동소송 지원 강화 ▶ 대부업법 개정(불법사금융업자 처벌 등) |
| | | 불법다단계 | ▶ 신고포상금제 홍보 강화, 특별단속기간 운영 ▶ 비대면 다단계 등 신종수법 대응 강화 |

◇ **경제정상화 과정에서 안정적인 성장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·밀착 관리**

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련 근본적·선제적 대응방안 마련

① 주요 품목 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 가동

-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 「**경제안보 핵심품목 TF**」(팀장: 기재부 1차관)를 운영하고, 실무 작업반 운영

* 기재부 1차관(팀장) + 공급망 기획단 + 총괄 품목·II, 대외 등 4대 파트별 실무 작업반 구성

② 위기 징후의 선제적 파악을 위해 **조기경보시스템**(EWS) 구축

- 특정국 수출규제 등 글로벌 수급 위험요인의 조기파악·전파를 위해 **4,000여개 품목*** 대상으로 EWS 운영

* 특정국 의존도가 50% 이상 또는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품목(부처 판단), 범용품목도 포함

| | |
|------|---|
| 외교부 | ▶ 수입의존국 해당공관이 해당국 정부정책 변화·무역분쟁·산업동향 등을 종합 점검·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구축 + 공관별 경제안보 담당관 선정 |
| 산업부 | ▶ 공관-해외무역관(코트라)-산업부-협회 등 유관기관 점검체계 구축 |
| 농식품부 | ▶ 농식품부 소관 주요 품목에 대해 업계·기관·협회·단체 등과 연계한 점검체계 가동 |
| 과기부 | ▶ 정보통신진흥협회(KAIT) 중심 ICT 협의체 통한 주간 모니터링 개시 |
| 복지부 | ▶ 복지부·식약처·협단체 중심 민간협의체 구성 및 주기적 가격·수급조사 개시 |

- 대응시급성, 경제·산업·국민생활 중요성 등에 따라 품목별 등급(A-B-C-D, 4단계)을 부여하고 **동향파악·보고주기** 등 차등화

③ 국내경제 영향, 대외의존도, 단기적 시급성,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,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**경제안보 핵심품목**으로 지정

* 100여개 품목에 대해 1차 선정(안) 既마련 → 200개 목표로 추가 선정 추진

- ‘경제안보 핵심품목’을 대상으로 **비축확대**, **국내생산 기반확충**, **수입선 다변화**, **국제협력** 등 **맞춤형 안정화 방안** 마련

| | |
|---------|---|
| 비축 확대 | ▶ 조달청 비축대상(금속 위주→국민생활 밀접 물자 포함)·비축물량(최대 100일→180일) 확대, 민간 기업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추가 재고 보유 시 보관비용 지원방안 마련 검토 |
| 수입선 전환 | ▶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기업의 물류비 상승분 지원 및 필요시 할당관세 적용 검토 ▶ 재외공관·코트라 중심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공급업체 발굴 및 DB화 |
| 국내기반 확보 | ▶ 범용품목 대상 시설자금 공급, 세제·금융지원 인센티브, 첨단품목 R&D 지원, 국내생산 독려 위한 공공판로 확대 지원 병행 |
| 국제협력 | ▶ 품목간 상호융통시스템 구축(예: 에너지국제융통시스템) 등 |

② 가계부채·한계기업 등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 노력 지속

- ① '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~5%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
-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의 정착을 위해 **차주단위 DSR 2·3단계** 시행
* ('22.1월)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시 → ('22.7월)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시
 - 기존 대출 상환유도를 위해 정책모기지 **중도상환수수료 한시 인하**
 - 현재 시행 중인 **보금자리론**(주금공) 중도상환수수료 **70% 감면** 기한을 **6개월 연장**(~'22.6월말)하고, **디딤돌 대출**(HUG)도 동일하게 감면 시행
 - **시중은행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** 참여도 유도(농협·기은 시행중)
- ② 부채 총량관리와 함께 **분할상환 확대** 등 질적 건전성 제고 병행
- '22년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(57.5→60.0%<잠정>)하고, **신용대출·전세대출도 분할상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**
* (신용대출) 5년 이상 분할상환 대출은 DSR산정시 실제 만기를 적용하여 한도 확대 (전세대출) 분할상환 실적 우수기관 정책모기지 배정 우대, **주신보 출연료 인하폭 확대**
- ③ 금리상승 등에 따른 **서민·취약계층의 부담경감 지원**에도 만전
- 정책서민금융을 **10조원 이상** 충분히 공급하고, 중금리대출도 확대
*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(조원): ('19) 8.0 ('20) 8.9 ('21) 9.6<목표> **('22) 10조원대**
중금리대출 예상 공급규모(조원): ('20) 30 ('21) 32 **('22) 35**
 - 특히, **금리상승기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대출한도 '22년 한시 상향**(+500만원)
* (근로자햇살론) 1,500 → 2,000만원 (햇살론뱅크) 2,000 → 2,500만원
 - **차주별 특성을 고려한 '맞춤대출 플랫폼(서금원)'을 활성화하고¹⁾, 금리인하 요구권이 내실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²⁾**
1) 최적 대출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연계 → 플랫폼 통한 햇살론 이용시 금리인하 유도 추진
2) 세부 안내기준 마련, 신청요건 표준화, 금리인하 실적 공시 및 홍보 강화 등
- ④ 시장 친화적인 **기업 구조조정 기반** 지속 강화
- **위기기간 중 일시 조정*됐던 기업 신용위험평가 정상화** 방안 검토
* ('19년) 연 2회 실시 → ('20~'21년) 연 1회 실시 & 평가 시 코로나 영향(피해)도 고려
 - **3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(1조원 이상) 및 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**
* 예) 중소기업 의무투자비율(35%) 초과 달성시 운용사에 추가 성과보수 지급 등
 - **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조정·사업재편·희생기업 지원 보장**
* (캠코)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 연장('20~'21년 2.0조→'20~'22년 2.4조원), 사업재편 승인기업 자산인수 지원(400→1,000억원), DIP금융(350→500억원) 확대 등

③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확실한 하향 안정 도모

- 1] 既 발표 대책의 **공급속도**를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**확기적 제고**
 - **공공정비·도심공공복합·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후보지**를 **추가 공모** ('22.1/4분기)하고^{1]}, **8.4대책** 주요부지별로 **연내 가시적 조치** 시행^{2]}
 - 1] 현재까지 2.4대책 관련 후보지 49.0만호 지정(공공정비 3.7, 도심복합 9.0, 소규모 2.1만호 등)
 - 2] (태릉) '22년 상반기 지구지정 (과천) '22년내 지구계획 확정 (마곡) '22.7월 착공, (조달청) 임시청사 이전
 - **'22년 사전청약은 당초 6.2만호에서 6.8만호로 확대** 시행(연초 상세계획 발표)
- 2] 기존 대책에 더해 시장안정 기능을 보완하는 **단기 주택공급** 촉진
 - **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** 공급을 포함하여 **11.19 대책** **'22년 既 발표 물량**(현 3.9만호)을 **최소 5천호 이상 추가 확대**
 - **모듈러 주택 건축기준**(용적률·건폐율) **완화** 등 **신유형 건설공법 확산**
- 3] **이중가격 완화 등 전월세 시장 안정**을 위해 **다각적 지원** 모색

| | |
|----------------|--|
| 임대인 인센티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상생임대인*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(2년)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('21.12.20~'22.12.31일 계약체결분 한정) * 직전계약 대비 5% 이내로 가격을 올린 1세대 1주택(공시가격 9억원 이하) 임대인 |
| 임차인 보호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갱신거절 임차인의 집주인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임대차 정보 조회 편의성 제고 * 임차인 신청시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지자체에서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교부 ▶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 발간·배포 → 분쟁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|
|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월세세액공제율 '22년 한시 상향(연소득5,500만원이상10% / 5,500만원이하12% → 12% / 15%) ▶ 전세반환보증보험(HUG) 지원 6개월 연장('21.12월말→'22.6월말) |

④ 금융·외환·대외부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도 선제 대비

- 1] **변이바이러스, 글로벌 인플레이,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** 등에 대응하여 **금융·외환시장 안정노력** 및 **대외신인도 관리***에 만전
 - * ('22.上) 무디스 연례협의를 및 3사 국가신용등급 발표(잠정), (下) S&P·피치 연례협의를(잠정)
- 2] **참가자 증가, 거래규모 확대** 등에 대응하여 **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**
 - **해외투자자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**를 위해 시간·절차상 제약을 대폭 개선하고, **MSCI 선진국 지수 편입** 추진
- 3] **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조치**(발행물량 조정, 바이백 등) **적기 수행**
 - 최근 국채 발행량 증가 등에 대응하여 **국채시장 인프라 선진화**에 중점을 둔 「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」 마련('22.上)
- 4] 「**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**」('21.10월 출범)를 통해 **글로벌 공급망, 기술경쟁** 등 **경제·안보 결합현안**에 대해 **선제적 대응 강화**

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

1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

◇ 한국판뉴딜 가시적 성과 창출과 함께 유망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, 제조업/서비스업 혁신·벤처 활성화·혁신인재 양성 등을 적극 추진

① 한국판 뉴딜 2.0 본격 추진으로 성과 확산·대한민국 대전환 가속화

① '22년 재정투자 33.1조원(디지털·그린·휴먼)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(지역균형 뉴딜도 '21년 10.8 → '22년 13.1조원으로 확대하여 체감도 제고)

① '22년 완료과제는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마무리

* 철도 주요노선 IoT센서(22 3만여개소) 지방상수도 스마트체계(22 161개 지자체) 사회서비스원(22 17개소)

② 디지털·그린 분야 등 뉴딜 2.0 신규과제(초연결 신산업, 탄소중립 기반 조성 등)는 '22년 예산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착수·집행

③ 청년 지원 필요성 증가,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의 불평등·격차 해소 등을 반영하여 확대 개편된 휴먼뉴딜 사업 본격 추진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디지털 (9.0조원) | ① DNA 확산 ② 비대면 인프라 ③ 초연결 신산업 ^{신규} ④ SOC 디지털화 | ▶ 데이터기본법 시행령 제정,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도입 ▶ 온국민 평생배움터 플랫폼 구축,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(6만명) ▶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, 지능형메모리 AI 반도체 개발 ▶ 철도 주요노선 IoT센서 설치(+1만개) ^{완료} ·국기하천(3,600km) CCTV 설치 |
| 그린 (12.7조원) | ① 탄소중립 기반 ^{신규} ② 녹색 인프라 ③ 에너지 전환 ④ 녹색산업 지원 | ▶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탄소영향 산정방법 개발, 탄소흡수원 확충 ▶ 지방상수도 스마트체계 구축(+40 지자체) ^{완료} , 그린리모델링(9.3만호) ▶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제도 시행, 마력차 보급(전기 44.6 수소 5.4만대, 누적) ▶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(3천억원), 친환경설비투자 융자(500억원) |
| 휴먼 ^{확대개편} (11.4조원) | ① 사람 투자 ② 고용·사회안전망 ③ 청년정책 ^{신규} ④ 격차해소 ^{신규} | ▶ 디지털 인재양성(SW중심대학 +9개소 등),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 강화 ▶ 플랫폼·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확대('22.1월 쿼서비스, 대리운전 등) ▶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(저축계좌, 희망적금, 소득공제 장기펀드) ▶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(+3개소) ^{완료} , 교육회복 종합방안 집중 운영 |

② 뉴딜 2.0 국민과의 성과 공유 및 민간으로의 확산 노력 강화

① '22년 뉴딜펀드¹를 신규 조성하고, 뉴딜 정책금융² 추가 공급

1) '22년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, 국민참여 뉴딜펀드 2천억원(잠정)

2) '22년 38.5조원 공급 (당초 18.4조원(5년간 100조원 공급계획) → 변경 38.5조원)

② '22.3월중 범부처 성과보고회 개최 등 체감도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, 양자회담·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 확산 도모

③ 뉴딜 혁신제품을 '22년 100개이상 신규 지정하여 혁신기업 지원

* (현행) 뉴딜 민간시제품(상용화 이전) 한정 → (개선) 부처추천 제품 추가(실제 사용 또는 도입필요)

③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(43개 중 28개 법률 입법완료) 임기내 마무리

* 개인정보보호법 분산에너지특별법 디지털포용법 등 국회 계류 → 통과시 하위법령 등 사전 준비

② BIG3, D.N.A., Post-新산업 등 유망 전략산업 집중 육성

- ①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**국내 BIG3 산업**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**기업-정부간, 기업간 협력·지원체계**를 본격적으로 가동

- ① **미래차 확산**을 위해 **친환경차 구매목표제**(‘22.1)¹⁾·**보조금 조정**²⁾을 실시하고, **R&D·금융·인프라** 등 **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**³⁾ 강화

- 1) 렌터카, 물류 등 대상기업 범위 및 의무구매비율 명시(친환경차법 시행령 등)
2) 보조금 지급기준액 조정 등 차량성능 향상, 가격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
3) (R&D) 환경규제 대응 R&D 신설 (금융) 미래차 사업재편펀드(‘22년 500억원) 등 (인프라)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 구축(광주), 자동차 연비시험 설비 확대 등

- ② **K-팹리스 밸리**(판교)*를 조성하고, 국제 경쟁력을 갖춘 **반도체·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** 기반으로 **차량용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** 수립(‘22.3)

*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,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등 차세대 반도체 인프라 구축

- ③ **‘K-글로벌 백신허브’** 성과 가시화를 위해 ‘22년 상반기까지 **국내 백신**을 개발하고, **K-백신펀드**(1조원)를 통한 **백신 상용화·수출지원** 강화

- **감염병 대응 플랫폼**¹⁾, **3세대치료제**(디지털치료제) 등 **유망분야** 육성에 집중하고, **병원내 개방형 실험실** 등 **인프라 확충**²⁾

- 1) 감염병 예측·진단·치료·예방 관련 핵심기술 개발(빅데이터 통해 확산예측, 확진 오류 검증 등)
2) 의약품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, 백신실증지원센터 활용, 스마트 임상실험 지원 등

- ② **D.N.A.** 인프라 기반으로 **민간 중심의 新서비스시장** 창출 가속화

| | |
|----------------|---|
| Data | ▶ 금융 마이데이터 (내 손안의 금융비서) 전면 시행, 데이터 수요예보제 추진, AI 학습용 데이터 확대(190→310종), 디지털 집현전 으로 국가지식정보 통합(25개기관 67개 사이트) |
| Network | ▶ 5G 전국망 구축 (‘22년까지 전국 85개市 행정동 등) 추진, 공공 WiFi 확산 (전국 시내버스 등), 5대 핵심서비스 (실감콘텐츠·자율주행차·디지털 헬스케어·스마트공장·스마트시티) 실증사업 확산 |
| AI | ▶ 차세대 AI(학습능력·소통능력 개선) 핵심원천기술 확보, 한국어 대형 언어모델 기술개발 |

- ③ **포스트 코로나시대** 새롭게 태동 중인 **클라우드·블록체인·메타버스** 등 **디지털 신기술·산업**을 우리 경제의 **미래 먹거리**로 적극 육성

| | |
|--------------|--|
| 클라우드 | ▶ 공공부문 정보시스템(2,149개) 민간 클라우드 전환 지원, 종량제 예산 도입 검토 |
| 블록체인 | ▶ 블록체인진흥법 제정 추진, 스마트계약·분산신원증명 지침 마련 등 법제도 정비, 공공부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블록체인 신뢰인프라 구축 |
| 메타버스 | ▶ 예술, 전통문화, 한국관광 등 콘텐츠 제작지원, 개인정보·사생활 침해 대응 법제 정비 |
| 헬스케어 | ▶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(서비스 범위 규정 및 사례의 명확·구체화), 비의료기관의 ‘건강관리서비스’ 유권해석 사례 공개 |
| 지능형로봇 | ▶ 사회문제(인력부족·감염병) 해결 위한 5G·AI기반 로봇서비스 융합실증, 첨단 제조로봇 실증 |

- ④ **유망 전략산업**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**BIG3, D.N.A.** 등에 대한 **정책금융 공급 대폭 확대**(‘21년 57.3조원 → ‘22년 65.9조원)

③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

1] 제조업 르네상스*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스마트·친환경화 가속화 지원

* '30년까지 4대 제조강국 도약 위해 제조업 부가가치율(25→30%), 신산업 비중(16→30%) 제고

- 데이터 기반 **제조혁신**을 위해 AI 제조 플랫폼 모델^{1]} 확산('22년 20종이상), 신규 R&D('스마트 제조혁신 R&D) 신설 및 전문인력 양성^{2]} 등 추진

1] 제조데이터 수집분석 및 솔루션 제공하는 클라우드(예 렌즈제작 온도압력 등 조정하여 정밀도 향상)

2] 기업의 의사결정자와 데이터 과학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'제조데이터 촉진자'('22년 100명)

- **조선업**은 수주·생산 시차 극복을 위해 맞춤형 인력양성^{1]}, 함정 수주시 보증부담 완화^{2]}를 지원하고, 무탄소·자율운항 등 미래선박 개발 박차

1]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수당 추가 지원(350시간 훈련시 월 20만원하는 훈련사업 신설)

2] 조선소가 협력업체 보증서 제출시 그만큼 조선소 보증 부담에서 제외('21말→'23말)

2] 소부장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, 밸류체인 공고화

- 미래기술 난제 극복을 위해 미래기술 연구실, 핵심소재 연구단을 확충하고('22년 각각 72, 18개), 우수과제 대상 갱신 R&D 도입(8년이상 지원)

- 소부장 특화단지별 협력모델을 추가 발굴(연내 10개 이상)하고, 기술역량·잠재력을 보유한 소부장 '오픈기업' 지속 확대(연내 60여개)

* (경기: 반도체) 양산성능 검증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(충북: 이차전지) 시험평가 센터 설립 (전북: 탄소소재) 탄소섬유 인큐베이션 허브 설립 (경남: 정밀기계) AI 연계 산단 디지털화

3] 진화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, 서비스 고도화와 新서비스 창출 촉진

-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, 저작권침해 종합 대응시스템^{1]}을 구축하고, 비대면서비스 바우처사업 개편^{2]}

1]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저작권 침해 발생~대응조치까지 단계별 업무과정 통합관리

2] 자부담율 상향(10→30%) 및 바우처 활용 필요성이 큰 기업에 우선 지원 등

- 新서비스 창출을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('22.上)하고, 新관광(해양치유) 기술개발 및 반려동물 산업도 적극 지원

4] 소프트파워 강국 입지 공고화를 위해 한류열풍의 지속·확산 지원

- 문화·콘텐츠 사업화 지원을 위해 차세대 콘텐츠(OTT 등) 제작지원^{1]},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 추가 개발^{2]} 및 투자펀드^{3]} 운영 확대

1] (OTT) 콘텐츠 제작지원금 확대(편당 3→14.4억원), 제작사-플랫폼사간 IP(지식재산권) 공동보유 (융복합콘텐츠) ICT신기술(5G·AI·XR)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(예 5G기반 5개국 원격 협주공연 등)

2] (現) 방송, 게임, 영화, 애니메이션, 뮤지컬, 웹툰 → (改) 음악/콘서트('22~), 캐릭터/이러닝('23~)

3] 모험콘텐츠(창작공연예술 등 소외분야) 투자펀드(2,001억원), 드라마펀드(400억원) 등

- 新한류 확산을 위해 재외한국문화원의 'Korea 콘텐츠 위크' 확대(7→10개소), 한류 콘텐츠·연관산업을 집중 홍보하는 범부처 K-브랜드 협업사업 추진

④ 민간 중심의 벤처·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

① 민간 중심의 **벤처 생태계 조성**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

○ **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¹⁾, 스톡옵션 제도 개선²⁾**

- 1) 벤처기업법 개정 완료(현재 법사위 계류중) 후 하위법령과 복수의결권 해설서 마련
- 2) 벤처기업 임직원 혜택 차별화(벤처기업법 개정), 비상장 주식의 시가평가 현실화(시행령 개정)

○ **민간 벤처펀드**에 대한 규제 완화¹⁾, **중간회수펀드** 신규 조성²⁾ 등을 통해 투자-회수-재도전 선순환 생태계 지원 강화

- 1) ①벤처펀드 현물출자(산업재산권 등) 허용, ②벤처펀드 출자자 규제 완화, ③창업투자회사의 펀드 운용 자회사인 업무집행 전문회사 설립을 허용
- 2)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(기 결성된 만기임박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 인수) 등 조성

② 민간의 **혁신역량 배양**을 위한 자금·플랫폼 등 다각적 지원 추진

○ **기술창업 지원**을 위해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¹⁾, 실험실 창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²⁾, 「G-스타 소통 플랫폼」³⁾ 등 운영

- 1) 관련 부담금 13개 면제 가능토록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등 개정('22.上)
- 2) 대학 내 혁신 기술창업 장려를 위해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 자금 지원
- 3) 신산업·융복합 스타트업과 정책부처가 만나 규제·갈등이슈 공유, 예방·해소 노력

○ 「**K-테스트베드**」 운영범위를 확대*하여 공공·민간기관이 제품·기술의 개발-실증-판매 전주기를 지원하고, 참여기관 평가·보상체계 구축

* 시범운영('21, 시제품·기술 실증지원) → 공식출범('22, 제품·기술완성, 판로개척, 판매 등 지원)

○ 「**대스타 해결사 플랫폼***」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을 확산(41→60개)하고, 일반인의 바이오 사업화·창업을 돕는 '바이오스페이스' 시범 조성

* 대기업이 자체 해결 곤란한 핵심 사업모델 구현을 스타트업에 공개 의뢰
→ 사업 선정 시 중진공 융자지원 한도 확대(60억원→100억원)

③ **新기술 혁신인재**를 20대 분야¹⁾에서 16만명¹⁾ 양성하고,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비용을 지원하는 **가칭ASA(Allied Software Academy)**²⁾ 사업 본격 추진

- 1) (디지털 8개) 11.5 (산업기술 6개) 2.3 (미래원천기술 3개) 0.15 (환경·바이오 3개) 1.9만명
- 2) 참여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공통 필요역량 도출 및 교육과정 운영(대한상의)

④ **규제 혁신**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분야를 확대(6→8개, 모빌리티·바이오헬스)하고, **규제비용 관리제**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('22.上)

○ **그간의 한걸음 모델** 성과를 분석하여 합의도출 절차를 제도화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'22년 신규과제*도 선정 추진

* (예) 전문직군과 플랫폼 기업간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 마련 등

⑤ 국가·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「**국가필수전략기술**」에 대한 육성·보호전략」을 마련하고, 특별법 제정* 추진('22.上)

* (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) 공급망 산업(반도체, 배터리) / 특화단지, 규제특례, 기술보호 (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 특별법) 전략기술(양자, 우주, AI) / R&D, 인력양성, 국제협력, 표준화

- ◇ **친환경·저탄소경제 전환과 기업의 사업재편·노동전환 지원**을 강화하고, **인구·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, 사회적자본 확산, 부문별 구조혁신 추진**

①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통해 우리 경제의 친환경·저탄소 전환 가속화

① '22년 “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”을 맞아 **후속조치** 본격 시행

① (법·제도) 「탄소중립기본법」(‘22.3월 시행)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, 「기후변화영향평가」는 시범사업을 거쳐 '22.9월 시행

② (재정) 4대 중점분야에 '22년중 11.4조원*의 재정을 투자하고, 「기후대응기금」(2.4조원, '22년 신설)을 통해 탄소감축 사업 지원

* 경제구조 저탄소화(7.9), 저탄소 생태계(0.8), 공정한 전환(0.5), 제도적 기반(2.2조원)

③ (감축경로) **부문별·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(경로)**를 포함한 「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」을 '22년 중 확정

④ (법정계획) **에너지·수송 등 각 분야의 법정계획 변경·수립 실시**

| 감축수단 |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| ▶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 대상, 연도별 허용총량 등 설정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에너지 | 에너지·전력수급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| ▶ 발전믹스 변화('30년 원자력 23.9 신재생 30.2 석탄 21.8 LNG 19.5%)에 따른 발전설비·계통망 보완 |
| 수송 | 친환경 자동차개발·보급 기본계획 | ▶ 무공해차 보급목표 상향('30년 전기·수소차 450만대)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, 충전인프라 확충 |

②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유도를 위해 **탄소저감 노력**을 **측정**하고, **실적에 기반**하여 **보상**(재정·금융·R&D·제도)하는 인센티브 체계 강화

○ 이행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, 기후대응기금 등을 적극 활용

| | |
|------------|---|
| 배출권 거래제 개선 | ▶ 시장참여 확대 유도 (시장조성자 추가, 증권사 자기매매 허용), 장내 파생상품 도입(∼'25) ▶ 배출권 할당 기업의 감축노력을 차기·추가 배출권 할당시 반영 |
| 기업 인센티브 강화 | ▶ (재정) 감축목표 달성 여부 따라 차년도 지원자 선정시 우대, 정책지원사업과 연계 ▶ (융자) 탄소저감 효과 근거로 우대금리 제공, 감축실적 미흡시 페널티 부과 금융상품 ▶ (보증) 온실가스 감축 기업업체 우대하는 「 기후대응보증 」 신설(산·기보, '22년 1조원) ▶ (R&D) 혁신기술 연구개발 집중 지원, 난이도·감축효과 고 기술의 예타 는 신속완료 |
| 국민참여 확대 | ▶ 저탄소 활동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「 탄소포인트제 」 확대 및 편의성 제고 ▶ 「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 」 실시, 「 탄소중립 아이디어 등록·거래 플랫폼 」 확대·개편 |
| 정부사업 개선 | ▶ 감축실적 기반 재정체계 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」 시범운영('22년 예산, 정식 도입'23년 예산) |

- ③ **친환경·저탄소 경영·투자의 자발적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**
- **ESG 경영 확산**을 위해 K-ESG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, ESG 공시체계 정비¹⁾와 함께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²⁾ 확충
 - 1) ESG 공시 - 정보공개 제도(환경정보, 고용형태, 기업집단현황 등)간 연계방안 마련
 - 2) 공공조달시 가점, 대기업의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비용 세액공제 인정('22.3)
 - **사업재편·ESG 경영 등 탄소중립 이행**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**1조원 규모 투·융자 프로그램**을 신설하고, **녹색국채*** 발행 가능성 검토
 - * 탄소중립 정책의지 표명, 지출사업 재원확보, 녹색채권시장 육성 등 목적으로 발행
→ '22년 상반기 중 국채시장 영향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 실시
- ④ **수소경제 모멘텀 확산**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R&D·컨설팅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고, 수소인프라 확충사업* 지속 확대
- * 수소교통복합기지(1→4곳),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확충(2→4곳), 수소 셀프충전 도입
- 청정수소(CO₂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 등) 인증제 및 수소발전 구매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소법 개정 추진
- ⑤ **신재생에너지 확산**을 위해 현장으로 해소, 주민참여 지원, 실증확산 등 추진
- 입지발굴에서 인허가까지 쏙과정을 지원하는 **풍력 원스톱샵** 도입 추진
 - * 「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」(원스톱샵법) 국회 계류중
 - 특히,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시 투자금¹⁾을 지원하고, 주민 이익공유 사업인 '**마을태양광 사업**²⁾' 시범 실시
 - 1) 주민이 태양광·풍력사업에 직접 투자(지분, 채권 등)시 장기 저리 융자 지원('22년 418억원)
 - 2) 건물·주택 지붕, 공용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 공유('22년 10개사업)
 - **해양생태계 복원**을 위해 친환경 부표를 확대¹⁾하고, 해양폐기물 저감량의 탄소저감 실적 인정 및 블루카본²⁾ DB 구축 추진
 - 1) 친환경 부표(스티로폼부표 대체율): ('21) 2,130만개(39%) → ('22) 3,272만개(59%)
 - 2) 갯벌, 염생식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
- ⑥ **저탄소·디지털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과정**(내연차→전기차, 석탄화력→LNG)에서의 **기업과 노동자의 대응능력 제고** 지원 강화

| | |
|---------|---|
| 추진체계 | ▶ (지원전담기관) 대한상의 내 「 사업구조개편 지원센터 」 설치('22.1/4) |
| 법·제도 개선 | ▶ (기업활력법) 사업재편 지원범위로 탄소중립·디지털전환 추진기업 추가 공정거래법 규제특례 (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) 대상 확대 ▶ (사업전환법) 지원범위로 신사업(탄소중립 등) 전환, 사업모델 혁신 등 추가 「공동 사업전환 제도」 신설 |
| 인센티브 강화 | ▶ (R&D)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&D 확대('21 100억원 → '22 180억원) ▶ (펀드) 500억원 규모의 「 사업재편 혁신펀드 」 조성('22.1/4) ▶ (융자) 중진공 사업전환자금 확대('21 1,000억원 → '22 2,500억원) |
| 노동전환 연계 | ▶ (인력)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(2.5만명) 신설, 기업 노동전환지원금(최대 300만원) ▶ (조직) 노동전환지원센터 (수요발굴·컨설팅)/ 분석센터 (직무분석·수급전망 등) 운영 |

②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및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

- ① '19년부터 매년 운영된 인구 TF 1~3기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, '22년에도 4기 TF를 출범시켜 생산가능인구 확대·보장 방안¹⁾, 인구 관련 대응체계 개선²⁾을 집중 검토

1) (예) 외국인력 활용, 고령자 계속 고용,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 등

2)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협업 강화, 인구정책연구단과의 정례 분석회의 등

| | |
|--------------|--|
| ① 인구절벽 충격 완화 | ▶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,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 취업지원, 중장년 전문인력 창업지원, 우수인력 유치 위한 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설 |
| ② 축소사회 대응 | ▶ 대학정원 유연화 , 1인가구 차별요인 해소, 뿌리산업 석박사 양성 |
| ③ 지역소멸 선제 대응 | ▶ 지역거점 육성 , 생활인프라 공동이용, 주거플랫폼 사업, 농촌공간 구획정비 |
| ④ 지속가능성 제고 | ▶ 노인돌봄 강화, ICT 활용·재택의료 활성화 ,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 |

- **인구 연구기능 강화**를 위해 지역인구 추계기간 확대(30→100년) 등 통계인프라를 개선하고, 경인사연 중심의 「인구정책연구단」 운영

- ② 추락하는 **출산율**의 **반등계기** 마련 위해 「**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**」*를 본격 시행하고, 이동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 출산·육아 부담 획기적 완화

* ①부부 육아휴직 활성화(육아휴직 급여 인상), ②영아수당 신설(22년 30만원), ③첫만남 꾸러미(출생시 200만원), ④공보육 확충(25년 이용률 50%), ⑤다자녀지원 확대(셋째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, 임대주택 2.75만호 공급)

- **일·생활 균형** 지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(30인 이상 사업장 →全사업장,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지원), **유연근무 확산**(간접노무비 지급) 지원

- ③ **지역소멸 선제 대응** 위해 인구 감소지역 주도 「**종합 인구활력계획**」을 수립하고, 「**지방소멸대응기금**」*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

* '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지원, 인구감소지역 위주로 재원배분, 생활인프라 개선 투자

- **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** 발굴·우대 지원¹⁾하고, **도심융합특구** 추가 지정 검토 및 문화·산업·주거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²⁾

1) (정부) R&D(최대 6년간 20억원), 정책자금, 보증료 감면 (지자체) 산단 입주, 보조금 우대 등

2) 대구·광주·대전·부산(既 지정)에 기업유치, 규제특례, 청년인재 정착지원 등 계획 수립

- ④ **초광역협력 확산**을 위해 시범사업('22년 223억원)¹⁾을 실시하고, 특별지자체의 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**초광역특별협약**²⁾ 등 도입

1) (부산·울산·경남) 해양쓰레기처리 수소선박 (대전·세종·충남) BRT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등

2) 지역이 필요로 하는 범부처 사업을 패키지 지원하고 인센티브(국고보조율 인상 등) 부여

- **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**('22년 1.2조원, 23개 사업)¹⁾는 **조속히 추진**하고, **혁신도시 20**(10대 브랜드 사업, 771억원)²⁾을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

1) (착공) 울산 외곽순환도로, 평택~오송 복복선화 (설계) 세종~청주 고속도로, 남부 내륙철도

2) 혁신도시 공유오피스, 혁신융합캠퍼스, 수요응답형 셔틀 등 10개 사업

③ 상생·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확산

- ① 온라인 플랫폼 대응 관련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¹⁾하고, 자율적 협력, 입점업체·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·제도개선²⁾ 추진

1) 플랫폼시장 기능(공정경쟁·산업 활성화·노동정책 등)·업종(금융·운송·콘텐츠 등)별 핵심이슈 논의
2) 계약서 작성·교부, 노출기준 공개, 앱 마켓 결제·환불사항 약관 명시 등

-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**콘텐츠 플랫폼**이 안정적으로 운영 되도록 **공정한 망이용환경 구축 방안*** 마련

* (예) 금지행위에 망이용 불공정행위 추가, 트래픽 현황·망 이용요금 실태조사 근거 마련

- ② **상생협력 확산**을 위해 지자체에 **상생결제 시스템**을 도입하고, 자상한기업(자발적 **상생협력 기업**)을 '22년 10개사 추가 발굴

- 플랫폼 기업-소상공인간 갈등이 심화되는 분야*에 대해서는 플랫폼 **상생 협의회**(동반위)를 운영하여 상생방안 협의 도모

* (예) 기업이 이용사업자의 유통경로를 장악하여 영향력 행사 또는 차별적 대우

- ③ **사회적 대화 활성화**를 위해 경사노위에 청년, 플랫폼 산업 등 다양한 산업·계층을 논의 주체로 포함*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, 의제발굴 확대

* 청년·비정규직 위원회 2기 위원 구성 및 출범('21.11월)

④ 재정·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

- 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·협업예산(17개과제) 고도화·국민참여예산 등 “**3대 재정혁신**” 추진

- ② 부문별 칸막이 완화 등을 통해 교육의 질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관련 제도 개편 지속 추진

- 교육청-일반지자체가 연계·협력하여 교육서비스 사각지대 및 고등·평생·직업교육 등을 중점 지원하는 「**공동사업비 제도**」를 도입

- 학령인구 감소, 교부금 증가추세 및 적정 교부금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한 **교부금 제도 개선 검토**

- ③ **공공기관 경영평가** 제도를 '22년 전면 개편*하고, 윤리경영 확대(경평 배점 확대), 방만경영 개선(복리후생 지침 준수여부 점감), 재무관리 강화 등 추진

* 평가정보시스템 구축, 조세연을 평가조직으로 재편, 컨설팅 결과 경영개선 계획 반영 의무화

IV. 2022년 경제전망

| | 2021년 | 2022년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■ 경제성장률(%) | 4.0 | 3.1 |
| ■ 취업자증감(만명) | 35 | 28 |
| - 고용률(% , 15~64세) | 66.5 | 66.9 |
| ■ 소비자물가(%) | 2.4* | 2.2 |
| ■ 경상수지(억불) | 910 | 800 |
| - 통관수출(억불) | 6,430 | 6,560 |
| - 통관수입(억불) | 6,125 | 6,280 |

* 현행 소비자물가(2015=100) 기준 전망치로 올해 12월 및 연간 실적(12.31일)은 기준년 개편 후 신계열(2020=100) 기준으로 공표될 예정

- ① **(성장) 정상 경로로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며 3.1% 성장** 전망
 - (내수) 대면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금년 보다 빠른 회복이 예상되나,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이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
 - (수출/투자) 금년 가파른 증가의 기저 영향에도 불구하고, 양호한 글로벌 경기·교역 및 반도체 업황 등으로 증가세 유지
 - * '21→'22년 세계경제 전망(% , IMF<'21.10월>) : (성장) 5.9 → 4.9 (교역) 9.7 → 6.7
 - * 반도체 매출 증가율 전망(% , WSTS<'21.11월>) : ('21^e) 25.6 → ('22^e) 8.8
- ② **(고용)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지속되면서 취업자수 +28만명 증가** 전망
 - 기저 영향,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, 내수 개선·일자리 지원 정책 등이 고용 회복을 뒷받침
 - * 생산가능인구 증감(만명) : ('20)△24.9 → ('21^e)△34.9 → ('22^e)△35.5
- ③ **(물가) 농축수산물·석유류 오름세 둔화 등으로 올해(2.4%) 보다 안정된 2.2% 상승** 전망
 - 다만, 내수 회복 등에 따른 수요측 상방압력 확대 예상
- ④ **(경상수지) 수출 증가세(+2.0%)가 유지되겠으나, 내수와 함께 수입이 증가(+2.5%)하면서 올해보다 축소된 800억불 흑자** 전망
 - 수출·무역규모는 올해 가파른 증가에 이어 '22년에도 증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2년 연속 역대 최대치 기록 전망
 - <수출액:('21)6,430 → ('22)6,560억불 / 무역규모:('21)12,555 → ('22)12,840억불>